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67회 제2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집행부 제출】

검 토 보 고 서



2019. 12.

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19. 12. 4.

경 제 도 시 위 원 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환경보호과장)
- 제출일자: 2019. 11. 21.
- 회부일자: 2019. 11. 21.
- 검토기간: 2019. 11. 22. ~ 11. 28.(5일간)

2. 제안이유

- 2016년 1월 이후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가 동결되어, 인건비 및 제반비용 상승에 대한 업체 수익률 감소됨에 따라 업체의 건전성 보장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2020년도 1월 2일자로 5.97% 인상된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인상된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 명시(현행 조례의 별표 수정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: 「하수도법」 제41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
-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행정규제 여부 검토결과: 해당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입법예고(2019.10.1.~10.21.)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2016년 이후 동결되었던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를 인건비 및 제반 비용 상승 여건을 반영하여 어느 정도 현실화 하고자 함
 -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원가조사연구 용역결과 인건비, 유류비,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를 1톤 기준 5.97% 인상을 반영하였으며,
 - 과태료 부과·징수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행정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으로 삭제하였음. 이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※ 불임: 관계 법령

【관계 법령】

하수도법

제4장 분뇨의 처리

- 제41조(분뇨처리 의무)** 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5., 2012. 2. 1., 2013. 7. 16.>
- ②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오지·벽지 등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5., 2013. 7. 16.>
-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·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(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스스로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, 스스로 수집·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④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·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·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5., 2013. 7. 16.>
-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·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질서위반행위규제법
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**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